

서울고속터미널, 지상·지하 입체개발 시동

서울시 고터,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트리플 역세권 등 개발 파급력 높아
지하차로 신설 등 입체복합개발 추진

서울시가 지난 9월 사전협상 대상지
로 선정한 서초구 14만6260.4㎡ 규모 서
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 민간사
업자(㈜신세계센트럴, 서울고속버스터
미널㈜)가 제안한 대규모 복합개발에
대해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한다.

이번 사전협상 대상지는 서울 중심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로, 한강 이남 유일
의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도심
및 공항까지 뛰어난 접근 및 연결성을
확보하고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차별성
을 가지고 있어 그 개발 파급력은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경
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아침은 서울,
점심은 부산’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시공간 개념을 바꾼 국가대표 교통거점
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약 50년 가까이 되는 노후한
건축물과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공간은 보행단절 및 도시슬럼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고
속버스 진출입으로 인한 만성적 교통체
증과 대기오염·소음 같은 교통공해 피
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동측 조감도. /서울시

이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개발계획
(안)에 따르면 노후화된 경부·영동·호남
선 고속버스터미널을 지하로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상부
에는 업무·판매·숙박·문화·주거가 결합
된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글로벌 미래융
합교통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공공기여를 활용
해 고속버스 지하 직결차로를 신설하
고, 주변 연결도로를 입체화·지하화해
지상부 교통량을 줄이는 등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 연계 입체보행고 등 한강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는 본 개발계획(안)의 공
공성 확보를 위해 광역적 차원의 교통개
선대책과 지역 필요시설 등에 대해 검토
하고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 나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계정 개설
압류부터 매각까지 ‘원스톱 징수’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국내 4대 가상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빗·코인
원에 모두 비영리 법인 계정을 개설하
고,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
정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1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가상자산이 사실상 새로운 ‘은닉 수
단’으로 활용되던 구조적 한계를 지자
체 차원에서 정면 돌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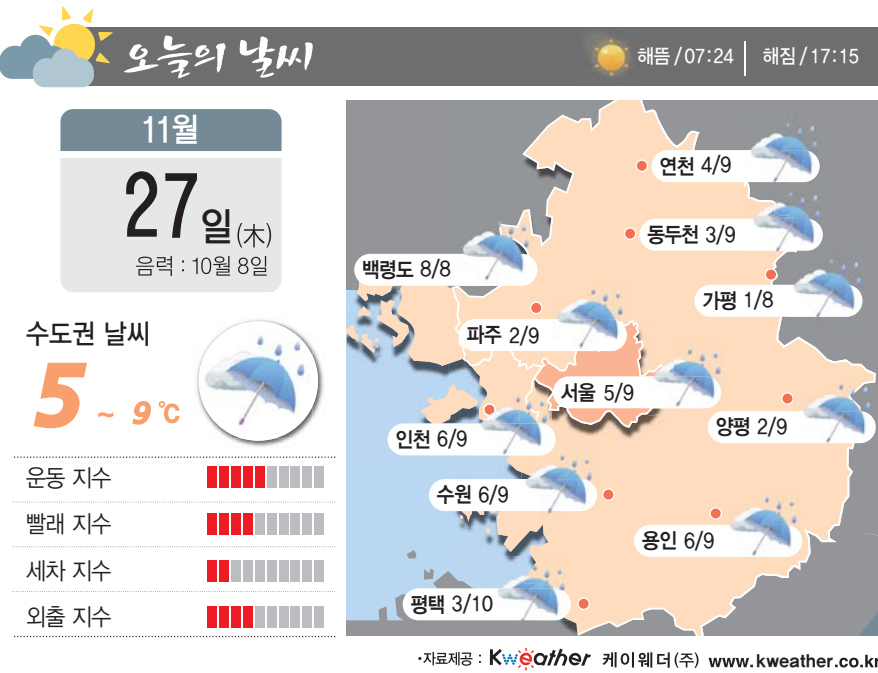
그동안 일부 체납자는 추적이 상대적
으로 어려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 재산
을 숨기거나 세금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국내 주요 거래소와 협의 끝에 네 곳
모두에서 법인 계정을 개설하는 데 성공
했다. 이로써 압류부터 이전·매각까지
를 한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상자
산 원스톱 징수 체계’가 갖춰졌다.

시는 현재 압류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자발적 매각 안내
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매각이 이루
어지지 않으면 시가 직접 압류된 가상자
산을 법인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한 뒤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매각 대금은 지
방세 체납액에 충당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메트로 한줄뉴스



▲베트남 중남부 홍수 사망자 90명으로…피해액 5000억원 추산 /사진 뉴시스
▲브라질 COP30 회의서 “기후변화 대응 총 동원령” 결의안 채택

▲中 왕이 “日 ‘대만 발언’ 레드라인 넘었다”…‘즉각 시정’ 촉구
▲국토부, UAE와 지방공항 운수권 주 4회 신설…도미니카와 항공협정 체결

▲“45석 이상 날릴 것”…日 여당, 의원 ‘10% 감축’ 초강수
▲영국 한류팬들과 어우러진 한국문화…‘한류콘2025’ 런던서 성료

교육부 “만족도 높아” vs 교원단체 “현장과 달라”

고교학점제 만족도, 현장과 온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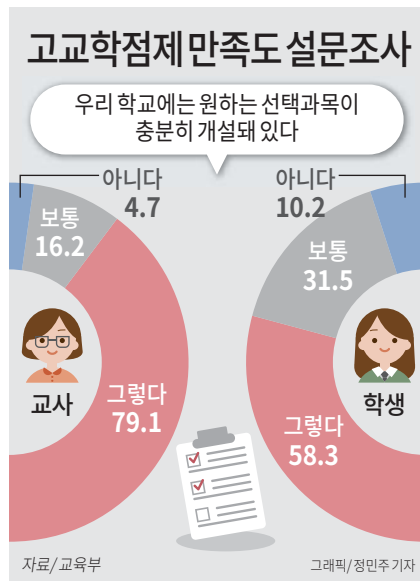
교육부, 고교학점제 만족도 조사
학생 64.2%, 교사 76.3% 만족
‘선택과목 개설’ 학생 만족도 낮아

교원단체, 현장과 다른 결과에 반박
설문방식, 제도적 문제 반영 어려워

정부가 실시한 고교학점제 첫 학기 만
족도 조사에서 학생의 60~70%가 과목
선택과 진로·학업 지도에 긍정적으로 응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반
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
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현실
과 동떨어져 있다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고교학
점제를 둘러싼 정부와 현장의 인식 차이
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정책 논의
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
국 일반고 160개교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 등 총 1만1513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만
족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
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문에서 전체
평균 만족도는 학생 64.2%, 교사 76.3%
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결과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이 실시한
첫 공식 조사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된다



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79.1%에 비해 학
생은 58.3%에 그쳤고, 개설 과목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58.4%로 상대적으로 낮
아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 규모·지역별 운
영 차이를 분석해 과목 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
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이번 결과가 학교 현장의
체감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단체
들은 “설문에 참여한 학교나 교사를 현
장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표집의 대표성
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과 교사에게 학교명뿐 아니라 학
번·이름·휴대전화번호까지 적도록 한

설문 방식이 비편적 응답을 위촉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설문 문항 구성도 논란의 핵심이다.
교원단체는 “문항 상당수가 제도 자체의
효과를 묻기보다 ‘나 자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형태”라며 “교사나 학생이 부정적 응
답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는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관련 설문에 부정적으로 답하면 이후 행
정 압박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불안이 존재한다”며 응답의 자율성
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고교학점제가 가져오는
운영상의 부담을 지적했다. ▲공통교육
과정 운영 ▲학생별 시간표 편성 ▲최
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으로 인해 학교
행정과 교사의 수업 준비가 크게 늘었
으며, 일부 학교는 전담 인력 부족으로 업
무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 3단체는 “이런 결과가 ‘현장 의
견’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근거로 활용
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하며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미
이수제 폐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일부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제도 보완을 통
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초등학교 예비소집… 소재불명 시 수사 의뢰

2026 초등학교 취학통지 실시
보호자,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시·도교육청,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와 예비소집을 실시
한다고 26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12월 3일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
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
다. 오프라인 취학통지서는 12월 10일
(지역별 상이)부터 20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가 우편(등기) 또
는 인편으로 발송한다. 정부24 취학통
지서는 취학 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발급되며, 모바일 앱으로
는 제공되지 않는다.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 제공
과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으로 실시한다. 각 학교와 지역별 일정
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기
재된 날짜에 맞춰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
에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을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

화 연락·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와 안
전을 확인하고, 필요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조기입학 또는 입학 연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
해야 한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으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학예정 학교
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도 보호자가
거주지 초등학교에 직접 입학을 신청하
면 된다. /이현진 기자

서울 아동센터 ‘맞춤 영어교육’ 시범도입

초등 1~2학년 100여명 대상

정규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 3학
년 이전 공교육 공백기에 놓인 지역아
동센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맞춤
형 영어교육이 시범 도입된다. 태블릿P
C·교육 콘텐츠와 함께 학습 코칭을 제

공해 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습 격차가
정보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6일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
터 초등 1~2학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서
울런3.0-서울형 영어교육’을 운영한다
고 밝혔다. 기간은 12월부터 6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교육
자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구
성 원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해 가구부
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영
어가 AI 확산 등으로 정보·지식 접근의 디
지털 기본 역량으로 자리 잡은 만큼, 학
습 효과 분석을 통해 연령·수준별 ‘서울
형 영어교육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
이다. /이현진 기자